

민주, '내란 사태 진상규명·재발방지 특별법'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준비 김민석 "결정적 제보자 형 감면" 박선원 "기존 법률 체계론 어려워" "내란 확산 방지 기여 표창·포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의 형을 감면하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증언·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게 형을 감경·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명령에 사실상 항명한 자들에 대해서는 표창·포상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 위 3차 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 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증언·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하거나 면제하는 것 등을 포함한 특별법 을 준비해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내란제보센터장은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서는 기존 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 확인돼 관련 특별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미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에서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분들 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사위원회에서는 계 엄 과정에서 내란 수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의 명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창·포상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계엄군인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따랐고 그 결과 본인이 반란군의 일원이 됐다고 해서 고통을 받는 많은 초급 장교들이 있다"며 "707 특임대, 특전사, 정보사 초급 간부, 블랙요원 등 모두에 대해 피해자로서

의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간으로 해서 반드시 특별법안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계엄군이 약 3시간 가량 국회의장 공관에 배치됐다가 정부의 계엄 해제 선포 이후 철수했다며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4일 당시 영상에는 오전 1시42분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 1시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해 감시 통제에 나서는 모습, 4시45분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한 후 철수하는 계엄군 모습이 담겼다.

국방부는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무처는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다. 당초 오늘 출석을 통보했으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추 의원 측이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당사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김선욱 기자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야 주도 본회의 통과

우원식 "韓, 임명 거부 명분 없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 등을 제외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추천 몫인 정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다만 한 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를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민주당도 한 대행의 입장 발표를 지켜본 뒤 즉각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했다"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임명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선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는 논란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거부는 명분이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스

전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전국 최다 선정

정부지원연계 장성·지리지 고흥 "2030년까지 청년농 1만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장성군과 고흥군이 선정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정부지원 연계형으로 장성군이, 지리지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흥군이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육성법'에 근거해 처음 이뤄진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총 4곳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2025년 첫 시행하는 이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기 4개월 전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 추천 대상인 장성군 사업계획에 대해 두 차례의 자체 전문가 자문 회의를 운영해 이와 같은 결실을 봤다.

'정부지원 연계형'인 장성군은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5ha에 조성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장성군은 삼계면 월연리 일원에 200억 을 들여 오는 2027년

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지원센터·APC 등을 신규로 조성해 지역특화 품목인 레몬으로 아열대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정부 사업비 지원 없이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33.3ha 면적에 스마트팜 임대단지 30.3ha에 달하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확장하는 데 관련 인허가 의제 시설 건립 간소화, 공유재산법 특례(수의계약·20년 장기임대), 대부료 감면(50%)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흥군은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 독립창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임대사업은 기본 5년 이후 평가 등을 거쳐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속 확대해 청년농업인에게 10년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창업 지원으로 2030년까지 청년농 1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한덕수 탄핵 공방...여야정협의체 출범 무산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로 예정됐던 협의체 첫 회의는 일단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불을 진압하는 게 우선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가 이뤄져야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차후 과정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국정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라며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그 이후 민생과 국민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며 "지금 80% 가까운 국민 요구는 내란의 조

기 진압이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민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협의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고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하자고 해놓고 당사자인 총리를 탄핵하겠다면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통령리더십연구원 광주 'DJ 탄생 100주년 북콘서트' 개최

대통령리더십연구원 광주지부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광주지부는 28일 오후 2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2층에서 '2024 광주, 저자와의 대화·북콘서트·교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북콘서트는 책 '지혜의 지배자 김대중'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현 정치권에 필요한 성공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 자료인 '지혜의 지배자 김대중'은 최근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의 저서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김대중의 삶과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며 정치지도자와 CEO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 등을 담았다. 특히 윤석열·김건희 리스크와 명태균 리스크, 이재명 사법리스크, 트럼프 2기 등과 같은 난제를 어떻게 풀지 김대중의 삶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했다.

최진 연구원장은 "김대중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이 명

확하게 담겨 있다"며 "이 책을 통해 그 어떤 정치 리더십 서적이나 자기계발서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QR code and logo for '진일보' (Jinilbo) with contact information: @ji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inilbo.com